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 변화 트렌드와 시사점
미국 대선 후보 정책 비교 분석

북한포커스

북한의 배터리 이용 현황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 변화 트렌드와 시사점	1
미국 대선 후보 정책 비교 분석	4

북한포커스

북한의 배터리 이용 현황	7
---------------------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10
--------------------	----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 변화 트렌드와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 미 영 (miyoung@kdb.co.kr)

-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 각종 디지털 솔루션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비대면 업무방식 정착을 위해 다양한 근무 형태 변화를 시도 중
- ◆ 비대면 업무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조직문화 정립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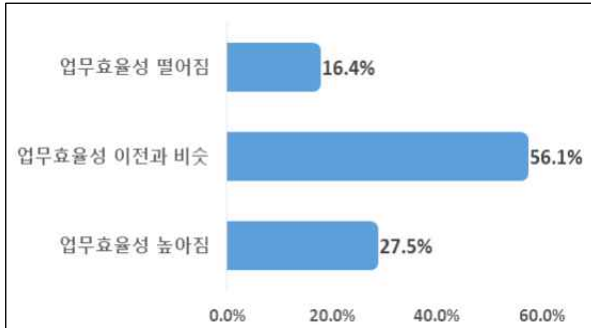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업무 공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 및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이 가속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직원의 안전 등의 이유로 원격근무를 시행했다는 기업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4배 이상 증가
 - ※ 대한상공회의소 (20.6.30)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 변화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시행 기업이 34.3%, 코로나19 이전 원격근무 시행 기업 8.3%
- '20.8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비대면 업무가 용이하고,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ICT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유통업계도 재택근무에 돌입
 - ※ ICT 기업(네이버, 카카오, NHN 등), 대기업(SK텔레콤, 현대차, LG 등), 유통업계(G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재택근무 돌입
-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를 쉽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제도 정비 진행
 - * 고용노동부 '20.4.2자 발표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에서 재택근무 근로시간 산정 및 복무 관리, 기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 주요 Q&A 등을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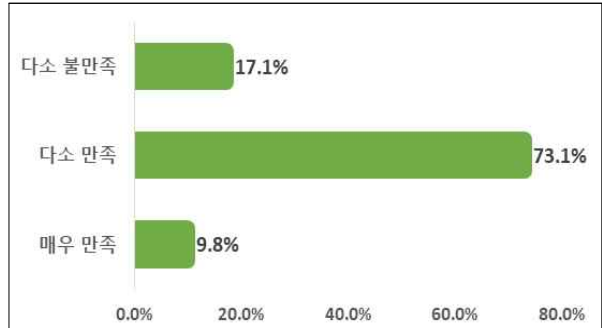
□ 원활한 비대면 업무를 위하여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면서 업무 효율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고, 일부 기업은 다양한 근무 형태 변화를 시도 중

- 코로나19 발생 초기 급격한 업무방식 전환으로 비대면 업무 방법 등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직원들은 업무 효율성이 이전과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임

비대면 업무이후 업무 효율성 변화 설문조사



비대면 업무에 대한 직원 만족도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6.30),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 변화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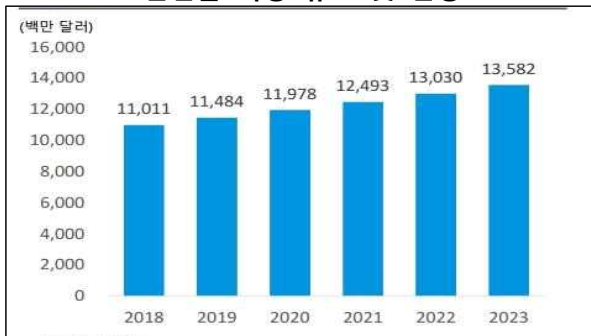
○ 업무 효율성 및 직원 만족도 등 긍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비대면 업무방식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

-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를 지속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0.8%를 차지
- 그 이유로 기존업무방식과 충돌(62.9%), 업무진행속도 저하 우려(16.7%) 등으로 꼽음
- ※ 대한상공회의소 (20.6.30)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 변화 실태조사" 결과

○ 원활한 비대면 업무를 위하여 화상회의 시스템 및 협업툴 등 디지털 솔루션을 업무에 활용하면서 비대면 업무의 단점을 보완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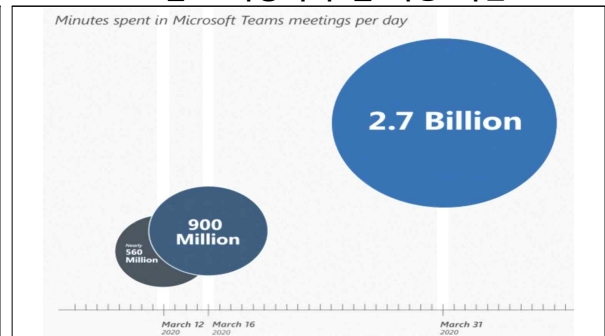
- 회의 및 보고가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률 급증
- ※ 화상회의 줌(Zoom)은 '20.5~7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배 성장, MS 팀즈(Teams) 내 화상회의 Call은 '20.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000% 이상 증가
- 파일 공유, 일정관리, 문서 작성 등의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협업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협업툴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협업툴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 Statista (20.6.4)

MS 팀즈 화상회의 일 사용 시간



자료 : MS "Remote Work Trend Report" (20.4)

○ 국내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된 4월 이후에도 비대면 업무방식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일하는 방식 및 근무 형태의 변화를 시도

- SK텔레콤은 원격근무 상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업툴 MS 팀즈 활용 및 거점 오피스 운영*을 주내용으로 하는 Digital Work 시행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
- * 분산 근무 필요성 및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종로, 서대문, 분당, 판교 등 4개소에 거점 오피스를 개소 후 강남, 송파, 일산, 강서 등에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

국내 주요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도입 노력

기업	특징
SK텔레콤	원격근무 상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거점오피스 운영 및 확대 계획
롯데지주	'20.5월부터 주1회 재택근무 상시 시행
롯데쇼핑	수도권 롯데백화점 공간을 활용하여 5개 거점에 225석의 거점오피스 마련
포스코	'20.7월부터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하여 재택근무 기간에도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
LG유플러스	'20.7월부터 마곡사옥 근무 중인 연구개발 임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주3회 (화·수·목요일) 재택근무 시범운영 후 확대 계획

□ 비대면 업무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든 자기 주도적인 조직문화 정립이 필요

- 비대면 업무환경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의 업무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평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조직문화가 필수적인 요소
 - 카카오는 기업의 핵심가치인 “신충헌”*을 근간으로 기업 활동 전반을 “아지트”를 통해 공유하고 실시간 피드백으로 자기 주도적인 조직문화를 강조
 - * 신충헌(신뢰·충돌·헌신)은 어떠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충돌하여 의견을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에는 구성원 모두가 헌신
- 정부 및 기업은 비대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근태 및 업무 시간”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관리체계의 변화가 필요
 - 새로운 근무 환경에 맞춰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직원 개인별 구체적인 목표 및 업무를 제시하고 업무 수행 중심의 평가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
 - 비대면 업무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 생산직 및 대고객 서비스업 등 비대면 업무가 용이하지 않은 업종이나 직무에 대한 대책 및 사회적 합의도 고려해야 할 것

미국 대선 후보 정책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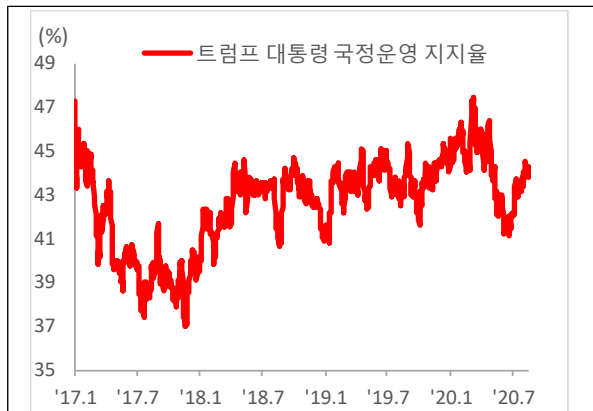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영교 (yoonyk@kdb.co.kr)

- ◆ 미국 대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후보의 정책 차별점에 대한 관심 부상(浮上), 대내 정책에 있어 “인프라투자 필요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면에서 상이
- ◆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시 기존 정책 유지·강화, 바이든 후보 집권 시 오바마 행정부 정책 기조 회귀 예상, 다만 대선과 상·하원 선거 결과 조합에 따라 정책 환경 변화 가능성 상존

□ “인프라투자 필요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정책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양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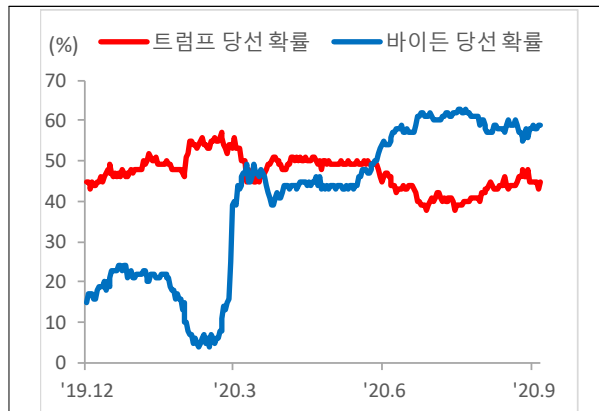
- 연초 발생한 코로나19 미국 내 감염자 수가 상반기 중 급증한 가운데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반대급부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지율 상승
 - 양 후보 당선 가능성이 비등해지면서 양 후보 정책의 차별점에 대한 관심 증대
- ‘재정 투입을 통한 인프라 재건*’,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양 후보 정책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 *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등 전통산업에, 바이든 후보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부문에 집중 투자 계획
 - 양당의 지지기반 산업이 달라 재정 투입 계획을 명확히 할수록 지지층 결집에 유리, 산업정책이 양당의 색깔차가 가장 분명한 분야
 - * 공화당은 내륙지역에 위치한 농업 및 전통 제조업, 민주당은 양 해안에 위치한 금융, 청정 에너지 등이 지지기반 산업
 - 트럼프 대통령은 ‘16년 대선 당시부터 전통 제조업 부문 재건이 경제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산업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설정

트럼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추이



자료: Bloomberg

양 후보 당선 확률 추이



자료: Bloomberg

□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성장과 보수적 사회 정책 기조 유지를, 바이든 후보는 중산층 확대 및 오바마 시절의 사회 정책 기조로의 회귀를 추구할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대체로 보수적인 시각에서 일반 사회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
 - '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인하한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율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및 고소득자 친화적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
 - * 법인세율(최고 세율 35.0→21.0%), 소득세율(최고 세율 39.6→37.0%) 조정 단행
 -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시간 당 7.25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 “오바마 케어” 완전한 폐기, 합법 이민 쿼터 삭감 등 집권 1기 중 진행한 정책 완결 목표
- 바이든 후보는 부자 및 기업 증세를 통해 중산층 확대를 추구하고 일반 사회 정책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 기조로 회귀를 목표로 함
 -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을 '17년 수정 이전 수준으로 전체, 혹은 일부 회귀
 -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 당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오바마 케어”를 보완·강화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완화된 이민정책 시행 공약

주요 분야 공약 비교

	트럼프 공화당 후보	바이든 민주당 후보
인프라투자	·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 부문 중심으로 투자 진행 · 노후된 사회간접자본 보수 속행 등	· 4년간 2조 달러를 청정에너지 부문에 집중 투자 · '35년까지 전력분야 탄소 배출 제로(0) 달성 목표 등
국제통상	· 관세를 통한 통상 협상 · 對中 무역·기술 분쟁 지속 ·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	· 자유무역주의 선호 · 일방적 관세 정책 지양 ·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對中 압박
국방 및 안보	· 미군 해외 주둔에 부정적, 동맹국 방위비 분담 비중 확대 요구 · 정상 간 일대일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 선호	· 외교적 노력을 통한 갈등 해소 · NATO 등 군사협력체 활용 · 이해 당사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선호
조세	· '17년 통과된 법안에 따른 세율 유지	· 법인세율 현행(최고세율 기준) 21%에서 28%로 인상 · 소득세율 인하 이전 수준(최고세율 39.6%) 회귀
고용	· 최저임금 현행(7.25달러) 유지	· 최저임금 15달러로 단계적 인상
의료	· 오바마케어 약화 지속	· 오바마케어 보완 및 강화
이민	· 합법 이민 쿼터도 축소	·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이민 정책
환경규제	· 규제 완화 기조 유지	·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주 : 언론보도 종합 정리

□ 대선과 같은 날 진행되는 상·하원 선거 결과 조합에 따라 정책 환경 변화 예상

-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상·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며 선거 결과 조합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 상존
 - '20년 11월 선거를 통해 상원은 전체 100석* 중 35석 교체 예정, 교체 대상 중 민주당은 12석, 공화당은 23석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
 - * 현재 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민주당 성향)
 - '20년 11월 선거를 통해 하원은 435석* 전원 교체 예정,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우위 전망**
 - * 현재 공화 197석, 민주 233석, 자유 1석, 공석 4석
 - ** 하원 예상 의석수는 민주 222석, 공화 188석 경합 25석(270-to-win 9월 4일자 여론조사)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우위인 현 정치 구도 유지 가능성 높음, 현재와 유사한 대내외 정책 환경 지속될 전망
 - 집권 1기 후반기에 중단된 쟁점 사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의회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레임덕에 의한 정책 추진력 약화 가능
 - *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오바마케어 폐지, 인프라투자 관련 재정 확보, 對中 압박 재개 등 현재 중단된 정책을 재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
-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민주당이 모두 장악,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진행된 정책이 빠르게 변화할 전망
 -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청정 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인프라투자 추진력은 다소 약화될 전망*
 - * 다만 미국은 주(洲)별로 산업정책 자율성이 보장돼 있으며, '17년 결성된 미국기후동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에 참여한 주는 바이든 후보와 유사한 정책 추진 중이라는 점 참고

북한의 배터리 이용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김 경 원 (mind@kdb.co.kr)

- ◆ 북한은 배전제한 등 전력난과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필요성이 증대
- ◆ 북한내 배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일부 자체 생산을 통해 공급되며, 기업소(저부하설비 급전용)와 가정(태양전지 축전용)에서 주로 사용 중
 - 반면 배터리 관련 대북수출을 금지한 UN제재(안보리결의 2397호)로 수입과 자체 생산에 난항

□ 일상적인 단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등에 따른 배터리(이차전지)* 수요 증가

* 축전기, 축전지, 바테리 등으로 명명

- 만성적 전력부족에 따른 전력 공급시간 제한으로 기업소와 가정에서 축전(蓄電) 수요 지속 발생
 - 한정된 발전량을 평양·군 주둔지 등 핵심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이외지역에는 특정시간에만 제한적으로 공급
- 전력난 타개를 위해 「자연에너지법*」 제정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중
 - * '13년 제정,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장려하는 것이 주요 골자
 - 안정적 발전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고려시 전력 저장을 위한 배터리 필요

□ 북한의 기관·기업소와 가정에서 배터리를 일상적으로 사용

- 기관·기업소는 배터리를 주로 단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등 저부하 전력시설 가동용으로 사용 중이며 최근에는 관광용 전기카트, 태양광 가로등 등에도 활용
- 가정에서는 자가보유 태양전지로 발전한 전력이나 국가 전력망에서 공급받은 전력을 축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
 - 북한에서 태양전지는 경제력 있는 세대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세대의 50% 정도에 보급된 것으로 추정*
 - * “北 태양광 사용 가정 크게 늘어...발전용량이 빈부격차 반영” 데일리NK('19.4.4자)

원산갈마지구 관광용 전기카트



자료 : 뉴스1(2020.05.19)

평양 태양전지 사용 주택



자료 : KBS뉴스(2019.02.23)

□ 북한 내 배터리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며, 일부 자체 생산한 배터리는 국영 유통망을 통해 기업소 등에 공급

- 중국산 다용도 배터리(7.5V, 12V 등)와 휴대용 소형 배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요 운송수단인 전기자전거에 사용되는 배터리 중 90% 이상은 중국산으로 추정**

* “북한 시장서 자체생산 전기제품 등장? 대부분이 중국산” 데일리NK('19.2.26자)

** “평양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일가족 사망” 아시아경제('19.7.17자)

- 생산공장은 러시아(舊소련)의 지원으로 '82년 건립된 대동강축전기공장이 대표적이며, 각 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산재
 - 주요 생산공장은 대동강축전기공장(평양), 개성축전기공장(개성), 사리원축전기 공장(황북), 신의주축전기공장(평북), 원산축전기공장(강원) 등
 - 주로 저효율 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는 중국산 중간재를 가공·조립한 수준

□ '17년말 배터리 및 관련 원자재를 대북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하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397호)로 배터리의 수입과 자체 생산 모두 차질 발생

- 구체적인 금지품목은 배터리(HS코드 8507), 납·니켈·알루미늄 등 금속과 그 제품 (HS코드 74~83) 등으로, 배터리와 원자재 및 관련제품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

- 배터리를 포함한 전자제품의 대중(對中) 수입금액은 '17년 94백만불에서 '19년 0.1백만불로 격감*

* 최장호·최유정('20.03),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대표적 생산공장인 대동강축전지공장도 '18년말 가동 중단*되는 등 자체 생산에 난항

* “김일성 다녀간 공장도 문 닫았는데... 개인투자 공장은 활기” 데일리NK('19.1.30자)

北 가정내 중국산 배터리 사용모습



자료 : DPRK360.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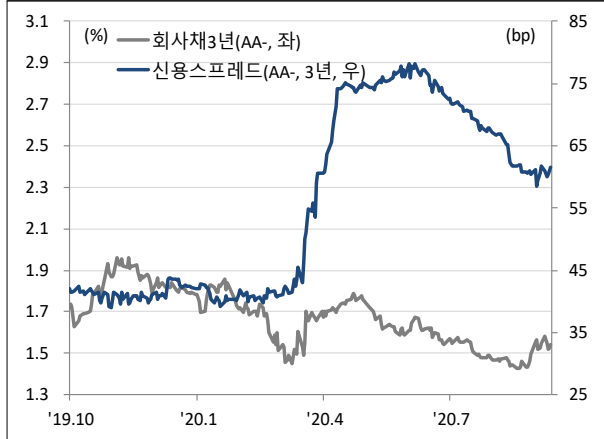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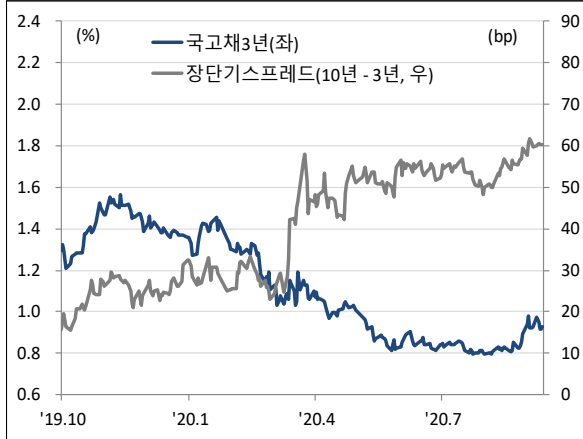
대동강축전지공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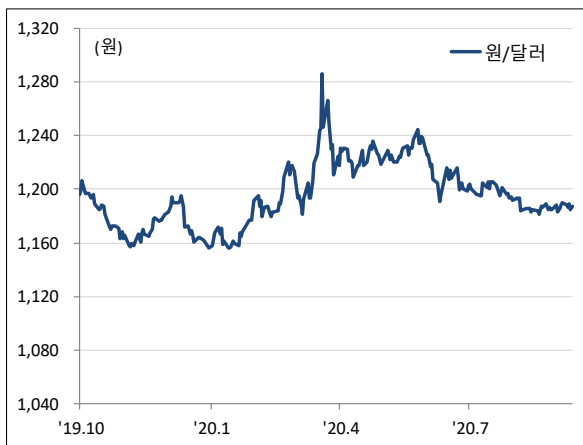
자료 : RFA(2011.11.28)

금리 · 환율 · 주가

금리 국고채3년 0.926% (0.3bp ↓), 신용스프레드 61.6bp (0.2bp ↓)



환율 원/달러 1,186.9원 (2.7원 ↓), 엔/달러 106.16엔 (0.08엔 ↓)



주가 코스피 2,396.69pt (1.2% ↑), 코스닥지수 888.44pt (2.59%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95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